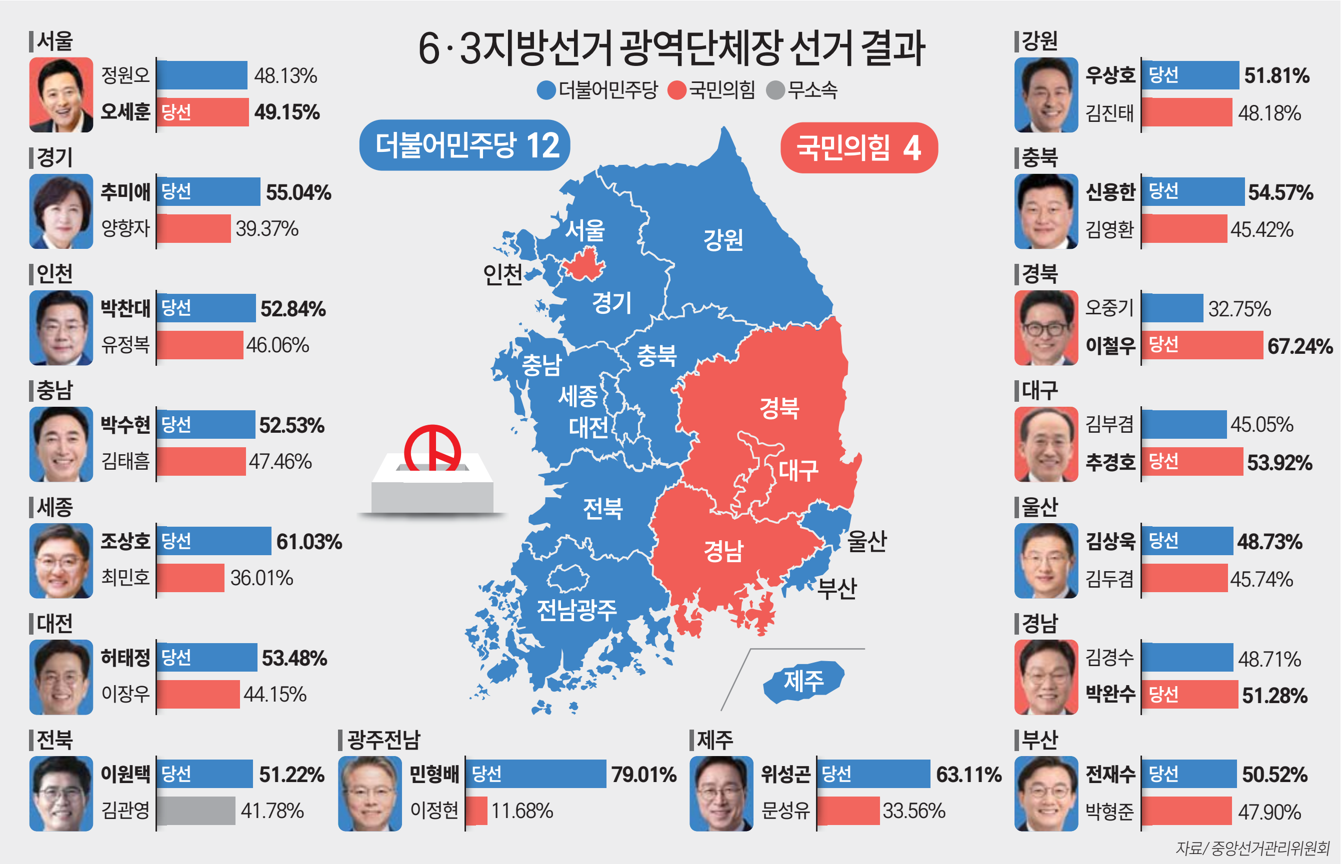
민주, 광역단체장 12곳 승리… 서울 내주며 '찜찜한 압승'

與, 부산·충남·강원 지방권력 재편
4년 전 참패 딛고 전국판 대반전
서울 역전패로 완승론에 제동

野, TK·경남 지켜 완패 위기 넘겨
한강벨트서 부동산 표심 부상
재보선 9석 확보로 주도권 강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선거 중 12곳에서 당선자를 배출하며 대승을 거뒀다. 국민의힘은 4곳을 지키는 데 그쳤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수도인 서울에서 막판 역전승에 성공했고, 경남에서도 승리를 거두며 'TK(대구경북) 자민련'이라는 오명은 피했다. 결국 민주당은 12곳에서 이겼지만 서울을 내주며 '찜찜한 승리'를 거뒀고, 국민의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패배했다.

4일 오전 지방선거 개표 결과를 보면 민주당 후보가 당선을 확정지은 곳은 전남광주·부산·인천·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 등 총 12곳이다.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을 확정지은 곳은 서울·대구·경남·경북 등 4곳이다.

민주당의 경우 핵심 전략지역이었던 부산과, 접전이 예상됐던 충남·강원에서 승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지난 2022년 17개 시·도지사 선거 중에서 5곳만 겨우 승리했던 점을 감안하면, 현역 광역단체장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상당히 성과를 거둔 셈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시장의 탈환을 이뤄내지 못하면서 '정청래 체제'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은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이날 오전 7시15분쯤 선두를 지키던 정원오 민주당 후보가 오 후보에게 역전을 당한 후, 표차가 벌어지고 있었다. 현재 서울의 개표율은 98.98%로, 오 후보는 49.07%, 정 후보는 48.21%의 득표율을 얻어 4만4000여표 차로 조접전이다. 남은 투표함을 열어도 정 후보의 재역전은 불가능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다만 사실상 오 후보의 당선이 확실한 상황임에도,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 후보의 당선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출구조사 발표와 개표 시작 이후에도 본투표가 진행됐는데,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이들의 집결로 해당 지역의 투표함이 반출되지 못하면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또 국민의힘은 서울 외에도 대구·경북·경남을 차지했다. 경북은 국민의힘이 넉넉하게 우세를 점치는 곳이었고, 대구는 접전지로 꼽혔지만 결국 대구 민심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했다. 아울러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중에서 경남을 지키면서, 'TK 자민련'으로 쪼그라들 수 있다는 우려는 벗었다.

앞서 지난 2022년에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에서 17곳 중 광주·전남·전북·경기·제주 등 5곳을 가져가는 데 그쳤던 민주당은 4년 만에 설욕에 성공하며 지방권력까지 장악하게 됐다. 하지만 서울에서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한 점, 대구에서 표차가 벌어진 것은 '조작기소 특검' 추진 등 지도부의 강경 기조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또 서울에서 오 후보가 우세한 지역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주택 가격이 높게 형성된 '한강벨트'였다. 마포, 영등포(여의도), 용산, 성수, 광진, 강동, 송파, 강남, 서초, 양천 등에서 오 후보가 앞섰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망국론'과 공시지가 현실화 등이 표심을 자극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민주당 지도부의 서울 선거 기조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서울이 부동산으로 인해 '보수화'됐다는 게 2021년 시장 보궐선거에서부터 나타났다. 이 기조는 그 이후 전국단위 선거에서 변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서울이 유리하던 과거'의 정치지형만 생각하고 선거에 임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민주당은 14곳 중 9곳에서 이겼다. 국민의힘은 4곳, 무소속 후보는 1곳을 가져갔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골목상권 살리고 지역산업 키운다… '정책금융' 방점

지선 당선인 금융공약 윤곽
서울, 소상공인 융자 3조 확대
경기, AI·AX 전환 비용 지원
인천, 금융허브·창업투자 추진
부산, 50조 동남투자공사 설립
전북, 성장공사로 지역기업 육성
충청, 지역화폐·창업펀드 확대

5선에 성공해 시장 직무에 복귀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4일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여름철 대책 특별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지방선거가 종료되면서 당선인의 금융공약에도 관심이 모인다. 경제성장률 상향에도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불경기가 지속중인 만큼, 각 당선인의 공약은 소상공인 중심의 정책금융 공약이 다수 제시됐다. 청년인구 유치를 위한 취업 및 창업 지원 공약도 등장했다.

◆ **수도권, 소상공인 지원 및 창업 활성화**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를 공약했다. 기존 2조42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융자대출'을 3조원까지 확대하고, 금리도 연 1.7~2.9% 수준까지 낮춘다.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은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금융을 약속했다. 불경기로 경영 부담이 누적된 소상공인에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디지털전환(AX)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비용도 지원한다.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은 '지역 금융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금융기업의 주요 핵심거점을 역내에 유치해 인천을 주요한 금융 허브로 발전시키고, 인공지능·바이오·콘텐츠·해상풍력 등 경쟁력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적 금융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공약이다. 특히 지역 내 스타트업에는 단계별 맞춤형 투자를 제공하는 등, 창업 생태계 활성화도 주요 목표다.

◆ **경상권, 역내 산업 재편 지원**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은 동남권을 아우르는 '거대 금융 허브' 조성을 공약했다. 주요 해운사의 부산 이전을 적극 추진해 역내에 대규모 해양금융 수요를 발생시키고, 지역 내에서 산업-금융 시너지를 확대하는 목표다. 또한 50조원 규모의 동남투자공사를 조속히 설립해 해운·항만·조업 등 주요 해양 산업의 혁신을 금융 측면에서 전폭 지원한다고 약속했다.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은 지역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정책 지원을 공약했다. 전통 제조업 중심의 지역 산업 생태계가 AI·AX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병행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은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경남청년연금'의 도입을 약속했다. 지역 내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18~39세 청년 가운데 연 소득이 2600만원 이하인 청년에 전용 정책금융상품을 공급해 소득 격차를 완화한다는 목표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은 중소기업은행의 본점 대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추진한다. 역내 기업 가운데 중소기업 비중이 99%에 달하는 만큼, 중소기업은행의 이전을 통해 역내 금융·산업의 시너지를 확대한다는 목표다.

◆ **전라권, '지역자립' 중심 경제재편**

민형배 전남광주통합시장 당선인은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한 기본소득을 공약하는 한편, 지역쏠림을 막기 위한 지역 내 제조업-농수산업 연계 활성화를 공약했다. 특히 인구유출 우려가 큰 농·어촌과 섬 지역에 금융지원을 우선적으로 실행한다.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은 지역 경제 자립을 위한 '전북성장공사'의 설립을 추진한다. 전북 기업들이 외부 기업 유치에만 매몰되지 않고, 역내 중소기업들이 경쟁력 높은 핵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 자금을 적극 공급한다.

◆ **충청 '역내 경제' 활성화**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은 '역내 경제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사용 금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온통대전'을 재도입해 역내 소비를 활성화하고, 정부의 '국민성장펀드'를 본뜬 '대전형 시민성장펀드'를 조성해 지역 내 민간 투자도 활성화한다.

신용한 충북지사 당선인은 '실물경제' 중심의 경제 재편을 공약했다. 지역 내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펀드'를 조성하고, 전국 최초로 가사수당 지급도 추진한다.

박수현 충남지사 당선인은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금융 지원과 '기후보험'의 시범 도입을 공약했다. 기후보험은 폭염·폭우·한파 등 이상 기후로 발생하는 인적·물적·경제적 피해를 지원하는 제도다. 온열질환이나 한랭질환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안승진 기자 asj1231@

한화에어로

생산 차질 감수하고 전사 안전점검 돌입

통합법인 출범 후 첫 동시 생산 중단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이후 국내 주요 사업장의 생산라인을 멈추고 전사 특별 안전점검에 들어갔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부터 5일까지 일부 필수 공정을 제외한 국내 사업장 9곳의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하고 특별 안전점검과 임직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추진제와 장약을 생산하는 대전·충북 보은·전남 여수사업장, K9 자주포와 장갑차, 항공엔진 등을 생산하는 경남 창원 1·2·3사업장, 대전·판교·아산 R&D캠퍼스 등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여러 사업장의 생산라인을 동시에 멈춘 것은 2023년 통합 법인 출범 이후 처음이다. 대전사업장 사고와 같은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일부 생산 차질을 감수하더라도 안전한 사업장 환경을 먼저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점검은 각 사업장과 사업장 안전관리책임자 주관으로 진행된다. 모든 사업장에서는 화재·폭발 위험, 중대재해 위험 요소, 불안전 시설·상태, 위험성 평가 결과, 사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기계장치와 작업환경, 구조물 재점검도 포함된다. 최근 3년간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화약류를 취급하는 대전·보은·여수사업장은 점검 강도를 더 높인다.

/원관희 기자 wkh@